

전문가 진단 2 베르너 파샤 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 동아시아경제학 교수

“속도 떨어지는 노동 개혁, 투자 위축 아쉬워 아베노믹스에 의존하다 시장 신뢰 잃을 수 있어”



베르너 파샤(Werner Pascha)
프라이부르크대 경제학 박사, 뒤스부르크-에센대
동아시아경제연구소 소장

“아베 정부는 경제 안정과 비즈니스 조건 개선이라는 성공을 거뒀다. 일본 기업들은 금융 완화와 엔저(円低)로 실적을 개선하며 자산을 축적했다. 주가도 상승했다. 이런 경제 조치는 일본 기업과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어줬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또 이른바 아베 정권의 세 개의 화살인 금융 완화, 재정 정책, 구조개혁이 적절히 조화를 이룬 것도 효과를 냈다. 금융완화 정책만으로는 성과가 없었을 것이고, 엔저 역시 단일 정책으로 펼쳤다면 국제적인 반감 등을 자아내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노동 시장 개혁이 아쉽다. 아베 정권은 일본 경제의 고질적 문제인 장시간 노동 관행을 없애기 위해 개혁 법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게이단렌(經團連) 등 재계 단체의 반발로 한발 물러섰다. 과로 사회 극복과 여성·노인 인력의 노동 시장 흡수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내수 시장의 한계를 느낀 일본 기업들이 국

내 투자를 꺼린 점도 문제다. 일본처럼 빠르게 고령화되는 국가의 경제는 활발한 투자로 생산성을 높여야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

최근 일본에 갔을 때 느낀 사회·경제 분위기는. “3~4월에 일본 도쿄에 두 번 다녀왔다. 거리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었다. 2020년 도쿄올림픽 관련 공사도 눈에 띄었다. 경제 전문가들을 만나도 ‘일본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사람들 표정에서 위기 의식을 느낄 수 없었다.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는데 위기를 느끼지 못했던 1980년대 후반 일본 경제의 거품이 꺼질 당사가 떠올랐다.”

일본은행(BOJ)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다. 효과가 있었다고 보나.

“일본 내 투자를 보자. 기업 이익은 급증했지만 여전히 투자는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적어도 수출지향적인 기업 중 큰 이익을 낸 곳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낮은 이자율과 능동적인 대출 시장이 주요 지향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필수 요인은 아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경제 정책이 일본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이유는.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트럼프노믹스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다. 국제 수요 증가는 일본 ▶

독일의 ‘질서 자유주의’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하나 있다. 바로 경제 정책의 불변성이다. 불변성은 정책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 원칙이 있고 이를 통해 예측 가능해야 한다.



◀ 일본의 민간 소비가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일본 도쿄 시부야. (사진 : 블룸버그)

▶ 경제가 저조한 내수 시장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일본은 달러화 가치 강세로 인한 엔저 효과를 보고 있다. 하지만 보호무역주의 등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리스크를 지니고 있어 그 효과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일본이 물가상승률 2%를 달성할 수 있을까.

“금융완화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 상승 동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가상승률을 2%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도 쉽지 않다. 앞으로 더 상승할 수도 있다.”

민간 소비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 해결책은.

“현재 소득에서 차지하는 저축률이 너무 낮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 소비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부동산 등 보유 자산을 팔면서까지 소비를 유도할 수도 없다. 소비 위축은 1990년대 후반 이후 디플레이션 시대를 경험해 소비에 인색한 유토리(여유) 세대도 한몫

하고 있다.

특히 일본 경제는 급속도로 늙어가고 있다.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 노동 측면에서의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이 줄고 소비 역시 감소했다.

결국 기업이 더 좋은 노동 환경을 제공하고 더 많은 임금을 줘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또 국내 투자를 늘리고, 생산성을 높여 소비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일본 정부가 소비세율 인상 시기를 연기했다. 소비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나.

“그렇다. 소비세를 인상해야 한다. 정부의 세무 등 경제·재정 정책은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펴야 한다. 그래야 신뢰를 줄 수 있다. 아베노믹스라는 마법 같은 정책에만 의지하려 한다면 정부가 시장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독일의 ‘질서 자유주의’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하나 있다. 바로 경제 정책의 불변성이다. 불변성은

정책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 원칙이 있고 이를 통해 예측 가능하다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변화에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한국 경제가 아베노믹스에서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아베노믹스는 현재 진행 중이고, 완벽하게 성공한 정책이 아니다. 더구나 구조개혁에선 여전히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아베노믹스가 다른 국가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Plus Point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20년’은 1991년부터 2011년까지 이어진 일본의 장기 불황이다.

1991년 이전의 일본 경제는 엔저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자·자동차·조선 분야에 세계 시장을 이끌었다. 연평균 5% 이상 성장하는 눈부신 호황기였다. 시장에는 자금이 넘쳐났고 그만큼 소비 규모도 컸다. 돈은 주식과 부동산으로 몰렸고 조용히 ‘거품’으로 쌓였다.

그러다 부동산·주식 거품이 붕괴됐고, 플라자합의 이후 누적된 엔고 부담과 한국 등 신흥공업국의 도전에 시달리며 기업 경기 역시 가라앉았다. 투자는 급격히 줄었고 소비는 부진에 빠졌다. 더구나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경제는 탄력을 잃어갔다. 이후 일본은 연평균 1%대의 성장률을 기록 중이다.